

“목포~부산 잇는 남해안고속철도 빨리 놓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공돈처럼 써”

광주·전남·경남·부산 국회의원 모임 창립세미나

지역갈등 해소·낙후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 기여

목포와 부산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남해안 고속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원으로는 광주·전남·경

핵기술본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와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남해안 고속철도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건설된다면 접근성이 2시간대로 크게 향상되면서 낙후된 남해안권의 경제 활성화와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은 현재의 관점 즉 단순히 경

제논리가 아닌 영·호남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대립 해소,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등 미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이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부산-마산 구간과 2015년 개통 예정인 진주-광양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업 추진이 부진

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던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 재개를 위해 2014년도 예산 200억 원이 편성돼 사업추진에 속물이 트이게 됐다”며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계획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이 모임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의원 ‘美 상원 주둔비용 보고서’ 공개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분담금을 공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상원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밝혔다. 국회 외교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채택한 ‘해외 미군 주둔비용 보고서’ 중 주한미군 부분 번역본 전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독상 약점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나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방위비분담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 상원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이전되는 용산기지 식당의 통합 및 리모델링에 분담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free money)’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애초 주한미군은 140만달러를 들여 용산기지 내 두 개의 식당을 통합·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운영비를 29만5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연간 운영비가 오히려 5만3000달러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원씩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런 통제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립기념 세미나

2013. 7. 2 (화) / 오후 3시 * 국회본청 구민식당 2호실 * 주최: 이주영·주승용 공동대표



‘남해안고속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일 국회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공동대표인 이주영(새누리당), 주승용(민주당)을 비롯해 박지원(민주당), 정의화(새누리당), 김무성(새누리당), 이낙연(민주당) 의원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왼쪽부터)

“성범죄자, 학교운영위원 못하게해야”

박혜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일 성범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27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열람·공개 요구 ‘경제민주화’ 힘 받는다

국회 본회의 가결... 녹음파일·정상회담 전후 자료 포괄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 요구 않기로... NLL 논란 새 국면

국회가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200명)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

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제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에 임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양당이 강제당론을 채택함에 따라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성곤·김승남·추미애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또 진보정의당

심상정·정진우·박원석·김계남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의원도 반대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가 열람·공개할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금산분리 강화법안’(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당사자인 재계는 ‘경제 악영향’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1호 법

안인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으로 꼽힌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단계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들도 이날 일제히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결석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료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식산업 진흥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

민주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정판 등으로 지정된 외식산업 전

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날 함께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지 유통인의 개념에 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어 야기됐던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가!

지하2층 ~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 × 150만원 12억810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 × 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